

주요국의 전략산업 재정지원 정책 현황

안중기 부연구위원

CONTENTS

I. 개요	2
II. 주요국의 재정지원 정책 현황	
① 미국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
2) 반도체 및 과학법	6
② 유럽연합(EU)	
1) 그린딜 산업계획	8
2) 유럽 반도체법	11
③ 일본	13
III. 결론	14

연구 요약

주요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일본의 재정지원 정책을 우리나라와 비교

* 전략산업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산업을 의미

비교 결과,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략산업을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EU는 재정지원에 있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

-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근거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27억 달러의 보조금, 243억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
-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조 엔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EU는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원에 대응

미국·EU·일본의 전략산업 재정지원 정책 비교

	주요 내용
미국	-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해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조금(예: 전기차 7,500 달러)을 제공 -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 보조금, 243억 달러 세제지원 (25% 세액공제) - 최근 Intel에 85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EU	- 원칙적으로 역내 공정경쟁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등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 미국에 대응 - 독일은 Intel에 100억 유로, TSMC에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일본	-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전환 추진전략’, ‘반도체 · 디지털 산업 전략’을 추진 - 전략 분야에 대해 최대 40%(반도체 산업은 최대 20%)의 세제지원 제공 - 2023년에 추가경정예산 약 2조 엔을 편성해 TSMC, Rapidus 등을 지원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은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조금 지급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 반도체 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한국은 25%(대기업, 한시적), 미국은 25%, 일본은 20% 수준
 - 우리나라는 '2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
 -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우리와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제공
 - 일본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20%의 세제지원
- 미국, EU, 일본은 자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
 - 미국, EU, 일본은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삼성전자, TSMC, Intel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
 - 미국은 Intel에 85억 달러, TSMC에 65억 달러,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의 강화 모색
 - 독일은 Intel에 100억 유로, TSMC에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일본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Rapidus에 6,456억 엔, TSMC에 6,322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
 - 우리나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이 병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재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 필요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통상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전략산업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산업을 의미¹⁾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및 과학법’ 등을 제정해 자국기업과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EU:** 역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 확대 적용을 통해 미국의 대규모 재정지원에 대응
 - EU 회원국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 EU 기능조약 제107조를 활용해 민간에 보조금 등 재정지원 제공
- **일본:** 일본은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산업 육성, 반도체 분야에서 과거 명성의 회복 등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전환 추진전략’과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을 발표

□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

- 정부는 ’23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²⁾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6%에서 25%로 상향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의 정의.

2) 2023년 3월 30일 본회의 의결(의안번호 20969).

-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제공(한시적)되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혜택³⁾
- ‘국가첨단전략산업법’⁴⁾, ‘공급망안정화법’⁵⁾, ‘소재부품장비산업법’⁶⁾ 등을 활용해 핵심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
 - ‘공급망안정화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제공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세제지원
 -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⁷⁾, ‘국가자원안보 특별법’⁸⁾ 등을 제정하여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국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존

□ 이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3) 기획재정부(2023).

4) 2022년 2월 3일 제정. 정식명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5)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2024년 6월 27일 시행. 정식명칭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6) 2019년 12월 3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정식명칭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7) 2023년 3월 21일 제정. 정식명칭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2024년 2월 6일 제정. 2025년 2월 7일 시행.



1. 미국

1)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 제정 배경: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 아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

-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약 3.5조 달러 규모)이 인플레이션 상승, 증세 우려 등의 이유로 무산
- 이에 바이든 정부는 BBB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예산 규모를 대폭 축소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을 추진
- IRA는 '22년 8월 7일 하원(찬성 220표, 반대 207표), 8월 12일 상원(찬성 51표, 반대 50표)을 통과해 8월 16일 공식 발효

□ 주요 내용: 10년간(2022~2031) 법인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를 조달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4,370억 달러를 지출해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⁹⁾

- **목적:**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 달성
- **수입:**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 조세행정 강화 등을 통해 10년간 총 7,370억 달러 마련
 -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을 통해 2,220억 달러, 국세청의 조세행정 강화를 통해 1,240억 달러 조달
 - 전문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제약회사에 대한 지원을 줄여 2,650억 달러의 재원 확보¹⁰⁾

9) Senate Democrats(2022).

10) 임소영 외(2023).

〈표 II-1〉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입과 지출 구성

(단위 : 십억 달러)

구 분	예산 규모(2022~2031)
■ 수입 증가 [A]	737
- 15% 최저법인세	222
-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265
- 국세청(IRS) 조세행정 강화	124
- 1% 자사주 매입 수수료 부과	74
- 초과 사업손실 제한 연장	52
■ 지출 증가 [B]	437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369
- 건강보험개혁법(ACA) 연장	64
- 서부지역 가뭄 대응 역량 강화	4
■ 재정적자 축소 [A-B]	300

자료: Senate Democrats(2022)

- **지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연장 등에 총 4,37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4,370억 달러의 대부분(3,690억 달러, 84.4%)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산업 육성에 투자할 계획
 -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기업에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대출, 대출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
 - 가령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일정요건(핵심광물 비율, 배터리 부품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수령

〈표 II-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주요 내용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63억 달러)	-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 등을 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 * (예)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 미국내 건립·확장 시 세액공제 혜택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160억 달러)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부품과 핵심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75억 달러)	북미 내 최종조립, 우려 외국법인 배터리가 미장착된 친환경차에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달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달러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36억 달러)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또는 차량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10억 달러)	기존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청정전력 투자(509억 달러) ·생산세액공제(112억 달러)	태양광·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투자 또는 해당시설에서 전력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30억 달러)	전기·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 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에너지부 대출보증(43억 달러)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 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2)

2) 반도체 및 과학법(CHIPS¹¹⁾ and Science Act)

□ **제정 배경:**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기술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을 제정(‘22년 8월)

□ **주요 내용:**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의 부흥을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정부지출 등의 형태로 약 2,800억 달러를 투입¹²⁾

11)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12) Badlam et al.(2022).

- 과학기술 R&D와 상업화에 10년간 2,000억 달러를 투입
 - 정부는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나노기술, 지역 기술허브 구축, STEM¹³⁾ 인력양성 등에 대규모 투자할 실시할 계획
 - 국립과학재단(NSF)에 810억 달러, 에너지부에 679억 달러 등을 배정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¹⁴⁾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770억 달러를 지원
 -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반도체 공급망 구축, R&D 투자, 인력양성을 위해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 정부는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243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누릴 전망
 - 미국은 Intel(1,000억 달러 투자)에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 TSMC(650억 달러 투자)에 66억 달러의 보조금과 50억 달러의 대출, 삼성전자(400억 달러 투자)에 64억 달러의 보조금 제공 계획을 발표¹⁵⁾
- 이외에 최첨단 기술과 무선 공급망 개발에 30억 달러 지출

〈표 II-3〉 ‘반도체 및 과학법’의 반도체 지원

법적근거	지원유형	내용	규모
sec. 102	보조금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	390억 달러
sec. 102	보조금	- 반도체 관련 R&D 및 인력양성 지원	132억 달러
sec. 102	보조금	- ICT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지원	5억 달러
sec. 107	세액공제	-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	243억 달러

자료: The White House(2022),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22)

13)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14) 미국 상원의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Division B Summary – Research and Innovation’
[송원아·이양경·김다은(2022)에서 재인용].

15) U.S. Department of Commerce(2024a, 2024b, 2024c).

2. 유럽연합(EU)

1)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 제정 배경: EU는 미국의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23년 2월)

- EU는 2019년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그린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공급망 안정보다는 탄소중립 실현에 초점
- 미국이 IRA를 발표해 친환경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 유지에 나서자, EU는 이에 대응해 ‘유럽 그린딜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탄소중립산업 역량 제고, 핵심원자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① 규제 간소화, ② 신속한 자금조달, ③ 기술 경쟁력 강화, ④ 공급망 유지를 위한 개방 무역 등 4개의 축으로 구성

-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으로 구체화
 - ‘탄소중립산업법’은 친환경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
 - ‘핵심원자재법’은 특정 국가의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구해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을 모색
- 위의 두 법률은 보조금 지급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수단보다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초점¹⁶⁾
- EU 회원국은 아래에서 살펴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추진

16) 임소영 외(2023).

〈표 II-4〉그린딜 산업계획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규제 간소화	-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하고 예측가능한 산업 규제 환경 조성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제정, 전력시장 구조 개혁(Reform of electricity market design) 실시
신속한 자금조달	-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역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마련 - EU투자(InvestEU) 프로그램, 리파워EU(REPowerEU) 계획*,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적극 활용해 자원 조달 *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은 회복 및 복원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을 통해 자원 마련 - 중장기적인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유럽국부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 설립 추진 -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를 통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 일반적 적용면제 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를 개정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 분야의 경우,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사전보고 의무를 면제
기술 경쟁력 확보	- 숙련인력 양성을 통한 신기술 개발 촉진 - 탄소중립산업 아카데미 설립,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 유도, 제3국 숙련인력에게 EU 노동시장 개방 확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개방무역	- 공정한 경쟁과 개방무역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자유무역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 - 제3국과 함께 핵심원자재 클럽 설립하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 구축. 역외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EU 회원국의 피해 방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3)

□ EU의 자금조달: EU는 회복 및 복원기금 2,700억 유로, 혁신기금 400억 유로, EU 투자 프로그램 3,720억 유로를 활용해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¹⁷⁾

- 회복 및 복원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은 탄소배출권 판매,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 이전을 통해 2,700억 유로 마련
 - 2,700억 유로 중에서 2,250억 유로는 대출에 활용될 계획이며, 나머지는 지원금 지급에 사용
-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400억 유로를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17) European Commission(2023).

- EU투자(InvestEU)는 민관협력 투자 프로그램이며, 투자금의 대부분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고, 정부는 주로 보증을 담당

□ EU 회원국의 자금지원: EU는 회원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자금 지원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국의 IRA 등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¹⁸⁾

- EU는 회원국간의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단일시장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회원국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규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TCF)'를 도입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 규제를 완화¹⁹⁾
- 미국의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CF를 개정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도입
- TCTF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²⁰⁾
- 원칙적으로 EU 회원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이를 EU에 사전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적 적용면제 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개정해 탄소중립 등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면제

〈표 II-5〉 TCTF의 탄소중립 전환 보조금

신설시점	법적근거	유형	종료시점
TCF 2022년 3월	TCTF section 2.5	리파워EU 계획과 관련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보급 촉진을 위한 투자 보조금	2025년 12월 31일 (TCF를 통해 기한연장)
TCF 2022년 3월	TCTF section 2.6	전기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 산업생산 프로세스의 탈탄소화를 위한 보조금	2025년 12월 31일 (TCF를 통해 기한연장)
TCTF 2022년 3월	TCTF section 2.8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보조금	2025년 12월 31일 (TCTF에서 신설)

자료: European Commission[김지이나·권소담(2023)에서 재인용]

18) European Commission(2023).

19)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음.

20) 김지이나·권소담(2023).

2)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 **제정 배경:** 미국의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반도체법’을 제정(‘23년 9월 발효)

□ **주요 내용:**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역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총 430억 유로를 투자²¹⁾

- EU는 반도체 관련 R&D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마련
 - EU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프로그램으로부터 '27년까지 33억 유로,²²⁾ '28~'30년 111.5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²³⁾
 - 이와 같은 공공투자는 민간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30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430억 유로가 투자될 계획
-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급망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정시스템 구축

□ **EU 회원국의 자금지원:** 회원국은 국가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EU 기능조약²⁴⁾ 제107조를 근거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 가능²⁵⁾

- EU 기능조약 제107조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특정 경제활동(혹은 분야)의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자금지원을 허용²⁶⁾

21) European Commission(2022).

22) 이현진·윤형준(2022), 이정아·도원빈(2023).

23) European Commission(2022).

24)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5) European Commission(2023).

26) (Article 107) 3. The following may be considered to be compatible with the internal market: (c) aid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certain economic activities or of certain economic areas, where such aid does not

- EU는 반도체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 자본집약적 특성을 근거로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
-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무역과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회할 때, 보조금 지급은 정당
 -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민간의 투자활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허용
 - 국가보조금은 경쟁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
 - 회원국은 국가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만 제공
 - 역내 최초 제조시설(first of a kind)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다른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독일은 Intel(300억 유로 투자)에 100억 유로,²⁷⁾ TSMC(100억 유로 투자)²⁸⁾에 5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²⁹⁾

adversely affect trading conditions to an extent contrary to the common interest.

27) Euractiv(2023).

28) Borsh, Infineon, NXP와 제휴.

29) Financial Times(2024).



3. 일본

□ 녹색전환(GX)³⁰⁾ 추진전략: 일본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투자를 늘리고, 세제지원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미국의 IRA,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전환 추진전략'을 발표('23년 7월)
- 향후 10년간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5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녹색전환 이행채권(국채) 등을 활용해 조달³¹⁾
 - 민간과 공공부문은 '녹색전환 추진전략'에 따라 자동차 분야에 34조 엔, 재생에너지에 20조 엔 등 총 150조 엔을 투자할 계획
 -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전환 이행채권(20조 엔)을 발행하고 탄소 부과금을 도입
-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관련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제공
 - 민간기업이 녹색전환(GX)과 디지털전환(DX)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반도체는 최대 2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³²⁾

□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 개정안을 '23년 5월에 발표
- 202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반도체 산업 지원 예산 약 2조 엔을 포함³³⁾
 - 일본 정부는 '21~'22년에 이미 약 2조 엔의 보조금을 Rapidus(3,300억 엔), TSMC(4,760억 엔) 등에 지급
 - '23년 11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Rapidus에 6,456억 엔, TSMC에 6,322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5,754억 엔을 사용할 계획³⁴⁾

30) Green Transformation.

31) 일본 경제산업성[이보람·손원주(2023)에서 재인용]

32) The Japan Times(2024), 정예지·윤인구(2024).

33) Ministry of Finance, Japan(2023).

34) The Japan Times(2024).



□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EU는 재정 지원에 있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

- **미국:** 주변국과의 통상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산업의 육성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전략산업에 세제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
- **일본:** 반도체 등 분야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에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제공
- **EU:** 원칙적으로 역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해 미국에 대응
-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경쟁 심화,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분쟁의 발생,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 등 재정지원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

□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조금 지급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

- 반도체 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한국은 25%(대기업, 한시적), 미국은 25%, 일본은 20% 수준
- 미국, EU, 일본은 자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이 사회적으로 팽팽이 맞서고 있는 상황
-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해 얼마 만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3).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보도자료(2023.01.03.).
- 김지이나·권소담. (2023).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주요 내용. 법률신문(2023.08.17).
- 산업통상자원부. (2022).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2022.10.19.).
- 송원아·이양경·김다은. (2022). 美,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TEP 브리프 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보람·손원주. (2023).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 포커스 Vol.6 No.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정아·도원빈. (2023).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08. 한국무역협회.
- 이현진·윤형준. (2022). 유럽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Vol.5 No.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소영·김계환·조은교. (2023).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 재법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23-09. 산업연구원.
- 정예지·윤인구. (2024). 주요국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현황과 전망.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 Badlam, J., Clark, S., Gajendragadkar, S., Kumar, A., O'Rourke, S., and Swartz, D. (2022). The CHIPS and Science Act: Here's what's in it. McKinsey & Company.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2). Summary: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f H. R. 4436.
- Euractiv. (2023). Intel stands by record semiconductor investment despite German budget problems(December 5, 2023).
-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Chips Act: Factsheet.
-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Chips Act: Questions and Answers.
- Financial Times. (2023). TSMC to build €10bn chip plant in Germany(August 8, 2023).
- Ministry of Finance, Japan. (2023). Overview of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FY 2023.
- Senate Democrats. (2022).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The Japan Times. (2024). Japan boosts aid to chip projects amid global race(February 16, 2024).
- The White House. (2022).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a).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Preliminary Terms with Intel to Support Investment in U.S. Semiconductor Technology Leadership and Create Tens of Thousands of Jobs. Press Releases(March 20, 2024).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b).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Preliminary Terms with TSMC, Expanded Investment from Company to Bring World's Most Advanced Leading-Edge Technology to the U.S. Press Releases(April 8, 2024).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24c).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Preliminary Terms with Samsung Electronics to Establish Leading-Edge Semiconductor Ecosystem in Central Texas. Press Releases(April 15, 2024).

FIS 재정리포트 24-01

VAR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재정적 물가 이론 분석

FIS 재정리포트 24-02

한·일·중 3국 재정운용 동향

FIS 재정리포트 24-03

주요국의 전략산업 재정지원 정책 현황